

# 기본소득은 가까워지고 있는가?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

때는 2016년 7월 서강대. “사회적, 전환과 기본소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대회가 열렸다. 나는 사회운동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열리는 대형 국제 행사에 신이 났다. 독일 국회의원 카티아 키핑을 수행하기도 했고, 이 세션저 세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발표와 토론도 들었다. 브라질의 에두아르두 수플리시 의원의 선창에 따라 모두 함께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를 부를 때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하지만 내게 그것은 유토피아<sup>utopia</sup>였다. 그 말뜻 그대로 그것은 ‘어디에도 없는 곳’이었다.

2022년 제20대 대선.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한 후보 두 명과 ‘국민배당금’을 공약으로 한 후보 한 명이 출마한 대선. 그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한 대통령이 생기는 첫 나라가 되는 것이었다. 현실에서 기본소득은 성큼 다가와 있었다. 2016년의 기본소득은 내 맘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의 기본소득이 가까이 온 2022년, 나는 그것이 한없이 멀게 느껴졌다. 왜 그랬을까?

### 기본소득은 위로부터의 정책 시행으로 충분한 단계에 이르렀는가?

한국에서 기본소득은 오랫동안 제도 밖의 사회운동 혹은 시민운동이었다. 그러다 2016년 성남시 청년배당이 시작되면서 기본소득은 지자체 내에서 시행되는 ‘정책’으로 격상되었다. 2019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시행되고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구성,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 농민기본소득 시행, 농촌 기본소득 시범 실시 등이 숨 가쁘게 진행되면서, 기본소득은 어느덧 ‘관 주도’로 시행되는 일련의 정책 방향으로 확고히 정착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어렵게 기본소득 운동을 해왔던 연구자, 활동가 중 상당수도 기본소득의 정책 시행에 힘을 실었다.

어떤 사회적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아 물질적 힘을 얻고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단계에서 공적 기관의 정책으로 발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기본소득의 지자체적 전개가 기본소득 운동의 충실한 발전을 통해 사람들의 충분한 지지로 동력화된 결과인가 하는 점이다. 그와 함께 지자체의 기본소득 정책 시행이 역으로 기본소득 운동의 저변 확대와 심층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점이다. 두 질문에 대해서 Yes라고 답할 수 없다면 기본소득 운동은 점점 특정 인물과 관련된 것으로 축소될 것이고, 포퓰리즘 동력에 의존하게 되어 리더십이 주체가 되며 대중은 객체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2009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창립 이후 소수의 문제의식에 불과했던 기본소득은 2016년부터 뜻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2016년에는 한국 사회에서의 기본소득 논의에 불을 지핀 다섯 가지 사건이 있었다. 첫째는 3월 알파고 바둑 대결, 둘째는 6월의 스위스 기본소득 개헌안 국민 투표, 셋째는 7월의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서울 대회 개최, 넷째는 4월 총선에 녹색당과 노동당이 기본소득 공약을 전면으로 내걸고 참여한 것, 마지막으로는 성남시 청년배당이였다. 2016년 이후 기본소득에 관한 책과 강연 등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고 2017년 대선을 경과하면서 그를 둘러싼 논쟁도 가열되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백화제방, 백가쟁명’은 이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다. 2019년을 경과하면서 기본소득의 논의 방식은 특정 인물에 대한 찬반으로 도식화되었다. 누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기본소득의 대중적 저변, 사회적 기반, 운동적 지평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력 정당 유력 대통령 후보의 ‘대표 정책’으로 표상될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이었다 해야 할 것이다. 누구는 그 정당이 싫어서, 누구는 그 후보가 싫어서, 어떤 이는 자신이 그 정당/후보와 연관되어 비쳐지는 것이 꺼려져서 시나브로 기본소득과 멀어져 갔다.

2019년 지자체 기본소득 시행과 2020년 총선 및 2022년 대선을 경과하면서, 시민운동과 사회운동 내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언급이 현저하게 줄었다. 2020년 기본소득당과 기본소득국민운

동본부의 출범은 그동안의 기본소득 운동의 조직적 성과인 면이 있지만, 기본소득 운동을 ‘게토화’하는 결과를 낳지 않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 이슈 정당’의 존재는 한국의 정치 풍토에서는 다른 정당들이 그 ‘원 이슈’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 같다. 정당의 연대는 모름지기 서로 공통분모를 이루는 특정 정책의 연대가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그 정당의 ‘모든 것’과의 연대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기본소득국민운동은 기본소득의 공간적 확장과 저변 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기존의 기본소득 운동과의 연속성이 결여된 분절적인 것이었고, 기본소득 운동을 특정 정치인과 관련해 연상하는 대중의 이해 방식을 오히려 강화해 줄 수밖에 없었다.

기본소득이란 용어와 기본소득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늘었지만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가져올 주체와 새로운 사회관계의 형성, 각개약진의 신자유주의적 인간성의 변화와 새로운 공동체적 생활 양식의 함양의 계기는 전혀 없이, 차기 대통령 선거와 관련되어 호명되기에 이른 기본소득 운동은 과연 이제 어떻게 ‘운동’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 기본소득의 설명 방식이 올바른 것이었는가?

기본소득이 멀게 느껴지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대선 기간 기본소득 논의의 양상 때문이다.

첫째, 기본소득 논의가 ‘액수 공방’으로 축소된 것 같은 느낌이다. 1인당 연 100만 원(월 8~9만 원)이 옳은 것인가, 1인당 월 65만 원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성인 1인당 월 150만 원이 옳은 것인가? 어차피 대통령이 안 될 것이므로, 당장 지키지 않아도 될 약속이므로 최대한 높은 액수를 부르는 엔터테이너가 등장하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세금 제도와 사회의 변화 없이도 시행가능한 최저의 액수를 부르는 상황이 된 것은, 대선 기간 기본소득 논의의 지형이 얼마나 뒤틀려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실례이다.

특히 국민 얼마, 청년 얼마, 노령 얼마, 농촌 얼마 식으로 액수를 각각 정하고, 그래서 농촌에 사는 청년은 국민+청년+농촌 기본소득을 합친 얼마를 받게 된다는 식의 논리 전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것은 기본소득을 ‘수당’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특정 연령, 특정 지역에 한정된 범주형 기본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일 뿐인데, ‘국민 기본소득’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그와 동시에 청년/노령/농촌 기본소득이 별도로 시행되는 것은 괴상하다. (농민기본소득은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되는 참여소득이므로 보편적 기본소득과 공존할 수 있다.) 더구나 ‘국민 기본소득’ 액수

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지급 총액을 청년, 노년, 농촌 인구에게 늘리기 위한 편법으로 기본소득의 논리가 동원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증세 없이 기본소득을 ‘시작’할 수 있다는 주장도 그 자체로 틀린 것은 아니다. “마트에 있는 맛보기 음식처럼 기본소득을 증세 없이 소액으로 지급해 국민께서 효용성을 체감한다면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증세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대통령 후보는 말했다. 낮은 수준의 부분기본소득 시행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의미 있는 액수의 기본소득, 충분한 기본소득으로 발전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다. 하지만 그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서 기본소득은 점점 뒤로 숨었다. 기본소득이 주요 공약인지도 나중에는 희미해졌다. 기본소득이 숨으면서 증세도 함께 숨었다. 증세가 숨었다는 것은 ‘사회적 전환’에 대한 논의도 숨어버렸다는 뜻이다.

기본소득과 생태배당, 토지배당 등 성격이 다른 제도를 한데 섞어 기본소득의 전체 지급액을 표시하는 설명 방식도 피해야 한다. 명심할 것은 배당을 하려고 탄소세를 걷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탄소세를 올리기 위해서 배당을 하는 것이다. 배당은 목표가 아니라 철저히 수단이며 목표는 탄소 배출 감소이다. 따라서 탄소세에 기초한 생태배당은 지급 방식이 기본소득의 5대 원칙을 충족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기본소득 모델이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탄소세와 탄소배당의 종식이 그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배출되는 탄소가 없어져 탄소세도 없고 따라서 탄소배당도 없는 세상이 이 모델의 최종 목표다.

토지보유세-토지배당은 없앨 수는 없겠지만 역시 줄어들수록 좋은 것이다. 강력한 토지보유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려야 한다. 토지보유세를 올리기 위한 방법론이 토지배당일 뿐이다. 토지초과이득세로 기본소득 재원을 삼자는 주장은 더 황당하다. 토지초과이득은 생기지 않거나 생기더라도 아주 적게 생겨야 하고, 토지보유세가 실효성 있게 작동한다면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에 반하여 데이터 배당은 커질수록 좋을 것이다. 데이터 사용에 따른 편익도 증대하면서 빅데이터 과세도 늘어난다면 좋은 일이다. 결국 성격이 다른 여러 개의 재원을 섞으면 전체 액수를 키워 보일 순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된다. 현금 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 탄소를 더 배출하거나 부동산 투기가 더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니겠는가?

기본소득은 사회적 총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물질 생산량과 에너지 소비를 줄여 탈성장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소득불평등은 탄소불평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초부유층일수록 지위재 소비와 과소비로 인한 탄소 배출이 과다하고 이 탄소 배출의 격차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일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런데 기후위기 시대에 오히려 기후운동가들 사이에서는 탄소세-탄소배당의 지지가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으로 인한 탄소세-탄소배당 모델에 대한 오해가 근본적 원인이지만, 앞서

언급한 잘못된 기본소득 설명 방식이 그 오해를 부채질하는 면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탄소세-탄소배당을 지속적인 기본소득 재원이라거나 충분한 기본소득으로 나아가기 위한 재원으로 설명한다면, 기본소득 운동가들은 ‘기본소득 지상주의자’처럼 보일 것이고 기후정의운동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 기본소득운동은 조급성 버리고 긴 호흡 준비해야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매우 강력한 헌법 기관이다. 하지만 리더십 교체를 통한 포퓰리즘적 변화 전략이 과연 지속성 있고 효과적인 사회적 전환의 전략인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그런 방식을 경과했던 중남미의 많은 나라들에, 의미 있는 사람의 변화, 관계의 변화, 제도의 변화가 수반되었는지, 수반되었다 하더라도 후속 리더십 아래에서도 지속되었는지, 필자는 알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본소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기본소득은 무엇인가? 기본소득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본소득은 어떤 사람의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가? 기본소득은 어떤 생활 양식을 만들려고 하는가? 기본소득은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가? 그에 대한 진정한 질문과 단단한 주체 형성 없이는 기본소득은 한 번 유행하다 사라지는 아이디어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특히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이 7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기본소득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기본소득은 기후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가? 기본소득은 어떤 정책과 결합되어야 탄소 배출 감축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 기본소득은 생태적 전환을 위한 수단인가, 총수요 진작을 위한 경제 정책인가? 이 주제가 부각될 때, 탄소세-탄소배당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 많은 사람이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